

기업윤리 브리프스

8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전문가 칼럼

글로벌 반부패 노력의 의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문형구 교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유지하려는 행위는 자연스럽다.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개인 성장의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기심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게 되면 자신과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 뇌물과 같은 부패행위가 대표적이다. 뇌물은 자신만의 이익 도모를 넘어서 동료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뇌물 제공자는 뇌물에 상응하는 대가를 챙기게 된다. 결국,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은 동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을 혼자 차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과 2003년 UN 반부패협약 이후 주춤하였던 글로벌한 반부패 노력이 최근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법보다 더 강력한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이 2010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글로벌한 반부패 노력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물이 전세계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다소 원론적인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내에서의 뇌물 수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서의 뇌물공여행위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부패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반경쟁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다. 2015년까지 전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바로 글로벌 기업의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뇌물제공이라는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뇌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 국민에게 돌아 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빈곤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뇌물을 주지 않으면 실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뇌물을 제공하면 나만 손해 보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모두가 뇌물을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반부패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한 반부패 노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전세계 빈곤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 부패인식지수(CPI)의 국가간 비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995년부터 매년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가간 부패의 정도를 비교하거나, 보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활용된다.

구분	국가별 점수 및 순위			
최상위 집단 국가	 덴마크 1위(90점)	 핀란드 1위(90점)	 뉴질랜드 1위(90점)	
상위 집단 국가	 스웨덴 4위(88점)	 싱가포르 5위(87점)		
아시아 상위 국가	 홍콩 14위(77점)	 일본 17위(74점)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 국가	 폴란드 41위(58점)	 헝가리 46위(55점)		

2012년 CPI 결과

윤리경영 트렌드

반부패 정책 추세와 기업의 대응

:: 부패 및 반부패정책의 개념

청렴(integrity)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로 정직 · 신뢰 · 공정 · 객관 ·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렴의 개념적 포괄성 때문에 반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 오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는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가 공동 1위, 스웨덴이 4위를 차지하였고, 그 밖의 상위권 순위 국가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45위, 56점)와 비슷한 점수를 받은 국가로는 폴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CPI 변동 추이는 지난 3호 브리프스에서 볼 수 있음.

▶ 2면에 계속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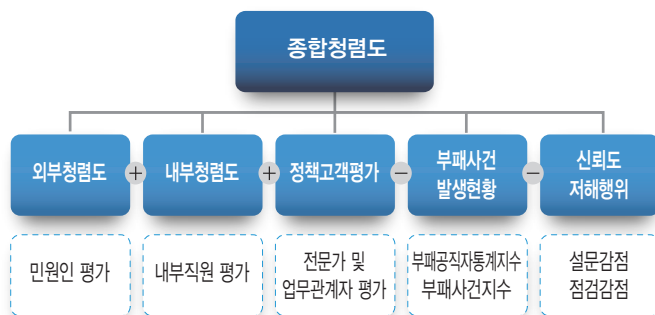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부패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데, 이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해 알아본다.

청렴도 측정이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청렴도 측정은 기존의 부패진단 체계의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부패인식 뿐만 아니라 '부패경험'도 함께 측정하며, '기관 단위'의 체계적인 부패진단 시스템으로 측정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청렴도 측정의 구성 체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신뢰도저해행위 제재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국민,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표이다.



청렴도 측정 절차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 윤리경영트렌드는 1면에서 이어집니다.

:: 해외 반부패정책 현황

핀란드는 공무원의 정직성과 행정 투명성을 중시하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로 정보공개제도, 의회 옴부즈만, 참조인제도, 사정감독원, 정당인 공공자금 지원이 있다.

특히 부패공무원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액수와 상관없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즉각 해임되고,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스웨덴은 반부패 기구로 대검찰청이 있고, 그 밑에 반부패부(NACU), 국가경제 범죄국(EBM)을 두고 있다. 그 중 국가경제범죄국(EBM)은 경제사범 전담기구로 최근 EU 보조금 관련 비리업무에도 주력하고 있어 주요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도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은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사건 등을 전담하며 높은 CPI 점수를 받는데 큰 몫을 했다.

일본의 특징적인 반부패제도로는 1960년에 도입한 행정상담위원회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무보수의 민간인이 행정민원 해결을 돕고 있으며 연간 150건에 이르는 행정개선이 이루어진다.

측정대상업무는 ①대민·대기관 업무일 것 ②충분한 수의 측정대상자 확보가 가능할 것 ③해당 기관과 측정대상자간 업무 접촉이 있을 것 ④기관의 대표적 업무, 부패개연성 있는 업무 ⑤업무 상담,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단순 반복적 업무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측정대상자 범위는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 소속직원이 되고, 외부청렴도의 경우 해당 대민·대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자, 즉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의 상대방이 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라 말할 수 있다.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의 명부 제출 범위는 최근 1년간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 내부청렴도는 기준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이다.

측정실시는 ①조사표본 규모 결정 ②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 구성·확정 ③각 기관에서 제출한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에 대한 DB 구축 ④구축된 측정대상자 명부 DB중에서 측정대상자 표본추출 ⑤측정대상자에 대한 측정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지만 전년도 점검기관 중 명부 누락, 표본관리행위 등이 심각하였던 기관을 분석하여 현지확인 필요한 기관은 추가 선정한다.

측정 결과는 ①청렴도 미흡기관 대상 청렴도 개선계획 수립·추진 독려 ②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 ③청렴도 취약 업무에 대한 원인 분석·대책 수립 ④내·외부청렴도 취약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⑤공공기관 평가를 관할하는 타기관 평가 등에 활용된다.

측정 대상기관 선정→측정 대상업무 선정→측정대상자 명부 수집
→ 측정 실시→현지점검→측정 결과의 활용

2012 청렴도 측정 결과

2012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평가(8.10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속직원(7.85점), 정책고객(6.86점)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37점)가 가장 높고, 시·도교육청(6.7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나타났으며,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민원인이 보고 들은 간접적인 부패경험률은 3.2%로 나타났고, 기관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의 간접 경험률(6.4%)이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1.2%)가 가장 낮았다.

:: 우리나라 반부패정책과 기업의 대응

우리나라 역시 부패방지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청렴계약제도와 준법감시인 제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실효성 있게 운용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경우 기존의 인터넷 신고, 청렴옴부즈만을 통한 내부 신고창구와 함께 24시간 부패신고접수 전용회선을 개설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사이버 신문고와 신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당사 직원 또는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비윤리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책해주는 '자진 신고 면책제도'도 운영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해 반부패에 관한 원칙을 기업 활동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있고, 선물 안받고 안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국민의 금융투자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조율하며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시장거래를 주도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는 그간 쌓아온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대한 본격적인 설계를 마련하고 있다.

체계적인 윤리경영 조직 갖춰...

한국거래소는 자체 윤리경영 조직인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반, 청렴 지킴이를 설치하였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중요 정책 결정과 운영규정 제·개정, 윤리경영 실천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윤리경영실무반은 윤리경영 및 청렴정책의 실무추진을 맡고 있다. 청렴지킴이의 역할은 윤리경영 및 청렴정책의 실무추진을 교육·전파·점검하고 부서별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담당자·윤리혁신조직·윤리전략부서로 구성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윤리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신입직원 청렴서약식

한국거래소는 특유의 윤리경영 활동들을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13년에는 경영지원본부 부이사장 및 신입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열었으며, 신입직원들은 각자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청렴서약식은 한국거래소의 신입직원들이 입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의식 개혁을 통해 청렴·윤리의식의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귀중한 자리가 되고 있다.



신입직원 청렴서약식(2013년 1월)

증권·선물회사 '컴플라이언스 대상' 개최

또한 한국거래소는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한 회원사 및 개인에게 컴플라이언스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위해 힘쓸 것을 천명하였으며,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들은 준법감시인 행동강령을 채택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준법감시인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공정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윤리경영 평가제도

한국거래소는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연간 단위의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크게 '투명'을 모토로 하는 통합경영공시 이행을, '청렴'을 모토로 하는 권익위 종합청렴도, '내부 견제'를 모토로 하는 내부감사 처분 이행을, '고객 만족'을 모토로 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PCSI), '사회책임'을 목표로 하는 봉사단 가입률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내부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등으로 향후 목표수정 및 개선방안의 근거를 마련 하려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 나눔경영 부문은 임직원 및 외부고객 설문조사 후 수요자 중심 방안마련



한국거래소의 사후관리체계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 역할

옴부즈만제도의 근원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행정감찰전문인제도 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처리한다고 해서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뜻하고, 시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여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옴부즈만의 본래 역할이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성장하기 좋은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수행은 이렇게...

우선 현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기한 불편 과제를 발굴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나 제도를 직접 개선하는 등 행정조치의 권한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대신해 해당기관에 개선 요청을 하는 일을 수행한다. 불편과제가 발굴되고 나면 규제대안을 심층분석한다. 그런 다음 개선방안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는 관계부처 검토의견 및 협의결과를 회신하는 것으로, 개선과제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위기관리 대책회의(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사례 홍보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목표 및 개선실적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13년 중점 추진과제는 행정제재 기준 합리화, 과실에 의한 행정위반 시 선(先)시정권고 의무화, 벌금할인 프로그램 등 행정제재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집적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개발 및 조성·입주·분양 불편을 해소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계약·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2013년 7월 2주차 기준으로 상담회, 현장방문, 협력기관,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애로 건수는 총 4,222건으로, 인력 상생 분야에서 82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금융 세제가 651건, 환경 입지가 633건으로 비슷한 수치로 뒤를 잇고, 가장 낮은 분야는 보건 안전 분야로 432건이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점을 느끼는 분야, 그리고 가장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인력 상생' 분야인 것으로 보여 진다.

개선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2,520건이 규제 안내, 지원제도 소개 등 상담을 통해 해결되었고, 601건은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으며(제도개선), 421건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장기검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재벌 총수 등 최대주주와 비등기임원 연봉 공개 방안 추진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사업보고서상 연봉 공개 범위를 재벌 총수 등 최대주주나 비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등기임원에 재벌총수 등 최대주주를 비롯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집행임원과 같은 비등기임원으로 대상범위를 넓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11월 29일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경우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최대주주와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 5억 원을 웃도는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 경영진들의 보수 수준이 공개될 예정이다.

"원조 투명성 확보 위해 국제기구 가입해야"

공적개발원조(ODA) 민간 감시단체인 ODA워치는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원조 투명성이란 기본적으로 원조자금의 사용 내역과 출처를 공개 해 국민이 자신의 세금으로 조성한 원조자금의 쓰임새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ODA워치는 "원조 투명성은 수혜국의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성장을 도와 최적의 원조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자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원조에 대한 인식도 높여준다."라고 설명하였다.

'원전부품 구매 투명성 확보' 민간위원회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원전 비리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향후 2~3개월 간 논의를 통해 국내 원전업계의 구매 제도 및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특히 구매절차의 투명성 제고,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한 품질 관리 기능 강화,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건설 분야에 샵메일 도입... 투명성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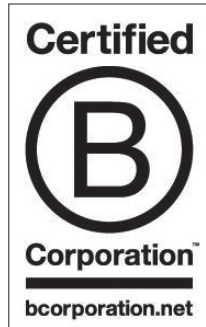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건설 분야에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을 도입하였다. 샵메일은 사용자 본인확인과 송수신 내용, 열람 확인,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주소로, 법적 효력이 있고 보안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를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공사 현장 당 종이 출력물이 약 5만 6,000장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전자주소 도입으로 건설업체와의 대면행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의 불편 해소와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EU, 부실은행 경영진 연봉 상한제 도입

EU가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구제금융을 받은 유럽은행에 대해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은행의 경영진은 해당 국가 일반인 평균 연봉의 15배 또는 해당 은행 직원 평균연봉의 10배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는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은행에 한해 EU가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윤-사회를 동시추구 'B코포레이션' 미국서 확산



최근 미국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 'B코포레이션(B-Corp)'이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B코포레이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에게 비영리단체 B랩(B-Lab)이 수여하는 일종의 공인증으로, 공정하게 거래된 질 좋은 커피에 공정무역 인증을 하는 방식과 같다. 6월 17일에는 미국 델라웨어주가 B코포레이션을 법제화 했는데, 델라웨어주에는 약 100만개의 기업과 포춘 500대 기업의 64%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B코포레이션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세계 27개국 60여개 산업 분야에서 약 786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미국 IT대기업-시민단체 개인정보 감시 투명성 촉구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대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개인정보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사 이용자에게 대한 정부의 정보요청 건수, 정부의 정보요청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계정, 기기의 수, 정부의 정보요청 대상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콘텐츠나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 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정부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성있는 리포트로 만들어 배포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영국령 버뮤다, 조세투명성 협약 지지...英외교문서

영국령 버뮤다가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협약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영국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크레이그 캐노니어 버뮤다 자치정부 수반은 "버뮤다가 조세정보공유에 관한 다국적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가 지지하는 국제협약인 다자간 조세행정조약(CMAATM)에 따르면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조세 당국이 볼 수 있도록 은행계좌 소유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전경련, 윤리경영 업무협약(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이성보 권익위원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윤리와 관련한 국내외 추세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 및 윤리경영 우수 실천사례집 발간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기업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로 하였다.



Q 1. 청렴도 조사를 하다보면 임직원들이 개인 인사상의 불만이나 예산절감에 대한 불만을 청렴도 조사에 포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관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렴도 측정 문항은 최대한 세분화 시키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평가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인사나 예산 절감 등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윤리적인 문화를 구축한다면 청렴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2. 윤리경영 성과를 측정하다보면 비계량적인 실적은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실적들이 계량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A 아쉽게도 비계량적인 실적이 계량적 성과로 직접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윤리경영 제도를 만들었다고 바로 윤리적 기업문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 제도가 정착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기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특정 윤리경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업원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윤리경영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윤리경영 체계, 조직문화 등)를 평가할 수 있는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여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추이를 점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3. 반부패, 청렴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들이 한편으로는 임직원들을 더욱 억압하는 결과가 되어, 임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직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기업에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경우, 임직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함에 있어 임직원의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도입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불만사항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내

제304회 서울 KSA 최고경영자 조찬회

정부, 국내외 CEO, 대학 및 연구기관, 사회·예술분야의 최고 인사들과 만나 국내외 경영·경제 흐름을 예측하고 최고 경영자간 경영 정보를 교환할 예정

- 주 최 : KSA 한국표준협회
- 일 시 : 2013년 8월 21일(수)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 간담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유엔과 기업이 손잡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여의 증진을 통하여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견해를 나눌 예정

- 주 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3층

해외

CSR Asia Summit 2013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성장불균등, 사회분열, 환경문제 등 여전히 수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

- 주 최 : CSR Asia
- 일 시 : 2013년 9월 17일(화)~18일(수)
- 장 소 : 방콕

The 2nd International CSR Communication Conference

CSR Communication Conference에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기업문화, 리더십, CSR 관리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

- 주 최 : 오르후스 대학교
- 일 시 : 2013년 9월 18일(수)~20일(목)
- 장 소 : 덴마크 오르후스



윤리경영 퀴즈

다음 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성장하기 좋은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3)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도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4) 윤리적 소비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정태홍님, 장효진님, 한웅희님, 박정현님, 윤수지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 •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